

# 소외된 풀뿌리 문화, 동네서점 법률적 냉대 받고, 지원책 거의 없어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 온라인과 대형서점, e-북의 파상 공세에 휘청거리

온라인서점과 오픈마켓의 저가 공세로 도서정가제가 유명 무실해지고,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e-북 시장이 커짐에 따라 출판산업과 고객인 독자들이 만나는 최일선인 동네 서점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나 적극적인 지원책은 커녕 출판관련법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현실에 더해 학생 편익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학원 내에서의 학습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형서점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를 벗어나 중소도시까지 진출하고, 대형 할인점에서도 서적 판매를 본격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출판산업의 뿌리인 동네서점의 폐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일선 동네서점은 10년 전의 5400여 곳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한 1800여 곳으로 감소하고 있다. (책 이외에 상품을 파는 매장은 제외한 숫자임)

이는 2000년대 초의 인터넷 서점 등장에 이은 대형 서점과 인터넷서점의 당일배송 서비스 확대도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들은 3년여 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지방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 실질적 역할 불구, 지원 법규 및 정책 부재

현재 출판산업을 지원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에 따른 서점 진흥 정책은 '문화행사'와 '유통'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서점 육성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출판법 제4조에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새롭게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서점 지원'도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서점의 문화행사, 서점인 교육, 서점 포럼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한국서련의 주관으로 200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지역서점 지원 사업계획'의 총 사업비는 4억6400만원(국고 4억3천만원, 민자 3천4백만원)으로 지난 2009년의 국고 1억3천만원, 2010년의 국고 1억2천만원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50개 지역 서점에 서점당 500만~3천만원의 문화행사비를 지원해 '저자 초청 강연회', '독서 운동', '지역 문화인과 독자의 만남', '지역문화 안내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열게 지원하고 있다. 이들 행사를 평가하여 우수 문화 프로그램운영 서점을 모델서점으로 선정해 앞으로 지역 서점의 운영 개선을 앞장서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점 지원 예산에 장기적이지 않고 서점 지원 정책도 단발성 행사로 치우치고 있다는 아쉬움을 사고 있다. 출판법에서도 서점 정책은 ‘유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출판법 시행령 제6조에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에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서점을 출판의 하위 범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출판법은 ‘서점’을 출판계의 주변부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서련 등 서점업계에서는 서점을 ‘콘텐츠 유통’의 ‘중심’부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점을 집중 연구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며 새로운 서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자체도 서점 지원에 인식 미흡

일선 서점의 어려움을 부채질하는 것은 중앙부처나 법률 차원에서의 지원 부족만이 아니다. 지자체의 서점 지원 정책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국가법령센터(www.law.go.kr)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검색한 결과, 서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그나마 독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 139곳 가운데 10곳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이미 지난 2006년 12월 28일 ‘독서문화진흥법’이 공포되었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지자체는 사실상 인식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는 독서 진

흥 전담 인력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10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독서 관련 업무를 명시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남 6곳이며 대전은 독서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과의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혀졌다. 이처럼 현행법과 지원책으로는 해마다 격감하는 지역서점의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동네서점을 집중 육성하기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동네서점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서점에서 문화행사를 몇 번 개최한다고 지역서점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점업계에서는 북카페식 서점, 디지털 콘텐츠 전시·판매 서점, 문화콘텐츠 습으로 변신한 서점 등 콘텐츠 이용에 따른 여러 제약을 받지 않고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실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점 준공영제 도입, 학원 내 도서 판매와 학원 직납 금지, 서점과 도서관의 협력 체제 구축, 서점 문화 행사 전문단체(기업) 설립 등 그 파급효과가 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점 진흥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칭) ‘동네서점발전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인쇄업계, 타산지석 삼을 여지 많아

서점업계의 어려움이 인쇄업계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

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쇄업계에서도 참고할 여지가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컨대,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다양한 내부 및 외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일정 규모의 자금 지원만 이뤄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 는 점도 공감대를 이루는 공통분모이다.

특히, 서점업계에서 '동네서점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거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 자금의 융자 우선권과 인수·합병의 연계 지원, 사업전환 실태 조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일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구 또는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시·군·구 단위의 영세한 지역신문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특별법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법',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 세밀하고 현실적인 지원책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

현재 서점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출판법을 통해 기존 동네서점의 모델을 깨트리고 혁신적인 동네서점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의 지혜를 모아 진화된 동네서점의 탄생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서련은 지난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중소 서점을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모델 서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울산, 충주, 대전 등 총 5곳의 지역 서점을 모델 서점으로 선정, 저자와의 대화, 독서 토론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에도 3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에 있다. 서점업계는 "동네 서점은 단순한 책 판매점이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각별한 지원과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서점업계의 움직임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 시행하고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립, 인쇄업계의 발전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인쇄업계에도 좋은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특히, 서점업계 내부에서부터 서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거나 서점을 일반 상업 공간과 달리 언론사나 도서관처럼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쇄업계로서도 공감에 충분히 가는 부분이다. 또한 서점인 스스로 서점 창업 등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면서, 지자체 조례에 서점 진흥을 명시하도록 해 무엇보다 성공적인 모델서점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인쇄문화산업의 실질적인 발전과 부흥을 원하는 인쇄인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